

## [ 오피니언 ]

光日春秋

김민영



지난 2006년 말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를 들고 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부동산정책이야말로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이라 맹공을 펴면서 반값 아파트로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으나 국민의 눈과 귀가 한나라당에 쏠린 것은 당연하다. 무능한 좌파정권에 맞서 횡기적인 민생정책을 내놓은 한나라당이야말로 민생정당이며 정책정당이라며 기yme를 토했다.

반값아파트로 특별히 재미를 보았던지라 한나라당은 뒤이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 대선에서는 '사교육비 절반'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내놓기도 했다. 이것뿐이었는가? 아이들 키우는 보육비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으며 통신비 인하, 기름값 인하 등 서민들의 부피에 확과 당하는 민생공약을 쏟아냈다. 바야흐로 민생이 우선이고, 반값이 대세인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았다. 그 덕분인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압도적 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반값 아파트 정책이 나오던 1년여 전이나 지금이나 민생은 어렵고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어우성이다. 아니, 1년 전보다 더 힘들어졌다. 원유, 원자재, 곡물 가격은 전점부지로 치솟고 환율이 벌뛰니

## 그 많던 '반값' 약속 어디 갔나?

수출 위주의 몇몇 재벌 대기업을 빼놓고 어렵지 않은 기업이 없다고 한다. 흑자를 이어오던 경상수지도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수직상승하며 서민생계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 우선 정치가 빛을 발해야 할 때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나라당은 '형님공천'이나, 친이·친박하며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민생우선정치가 가장 절실했을 때 나몰라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 역시 지금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난 20일 새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천만원시대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에게 무상 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대출, 무이자 대출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전만원 넘는 등록금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다. 그나마 대책이라 내놓

은 것도 이미 참여정부에서 계획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재탕 삼탕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교육비 절반 약속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다. '어린이' 영어몰입교육 논란에, 전국일제고사 부활로 학원가는 때 아닌 초 호황기를 맞고 있다. 학원 수강료가 안 오를 리 만무하다. 사교육비가 두 배로 드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조차 슬그머니 빼졌다. 통신비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고 손을 들었고, 기름값 인하도 말만 무성했을 뿐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그andan '반값' 약속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라 했던가? 공약은 공약일 뿐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말이 괜히 나온 것 이 아닌 것 같다.

총선이 코 앞이다. 그 '반값'이 가장 절실했을 때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는 집권여당은 안정적 국정수행을 위해 또 다시 표를 달라고 한다.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

〈참여연대 사무처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이명박 정부의 영어 교육 방침에 대해 찬반 여론이 많다.

반대하는 쪽은 우리 말이 소홀히 취급되고 외래어가 드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탈일 게다.

모든 약에게 악을 쓸 때는 손익 계산을 한 다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철방하게 된다.

영어조기 교육도 어느 정도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지만 필자는 익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단언한다.

좋든 싫든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정치나 이념을 넘어 실리를 추구하는, 국제 개념이 희미해지는 소위 글로벌 시대인 '한나의 정부'(one world government)

분명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언어는 단순히 공부로만 배워지는 것 이 아니다. 10살 이전에 익히지 않으면 어려도록 두뇌 구조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35년간 미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미국인들과의 대화에 자신이 없다. 유치원 때부터 3년을 공부하고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한 초등학생이 필자 보다 미국인과 의사소통을 훨씬 잘하는 것을 보고는 창피함마저 느꼈다.

이 같이 '영어실력'과 '회화'는 별개의 문제다. 영문학을 전공한 영어교사가 영어회화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수치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기초가 잘 다져진 교사들이기

## 조기 영어 교육

ment) 형태로 전환되어 나가리라는 것 이 대다수 학자들이 예상하는 대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해 살아남으려면 지나치게 내 것만을 고집하는 국수주의적 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생존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끈임없이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 생활의 법칙이듯이 국가적으로도 적응에 성공하는 나라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곳은 여러 민족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세계 최상위권의 민족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쟁에서 번번이 밀리는 것은 언어 문제 때문이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여러 해를 배웠는데도 미국인을 만나면 대화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피해야 하는 상황은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영어회화 수업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일선에서 교사들이 영어회화 수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필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만은 이런 어려움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기 영어교육을 적극 주장한다. 인간의 두뇌는 거의 무한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언어를 동시에 소화 시킬 능력이 있다.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서 절대로 한국말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면 필자는 내 자녀에게 확실한 영어 구사 능력을 물려주는 것이 수십억 원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는 '미국말'이 아닌 '세계 공통어'이다.

##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처하자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대비해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 모두가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러한 온실가스 증가 현상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데 있다.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저감기술 및 인프라 구축은 아주 미미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상이기도 하다.

몇 달 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발표한 다보스 세계 환경성과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환경성과는 세계 51위였다. 오존 오염 등 25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총점 79.4로 조사대상 149개 국가 중에서 5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세계 5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10위였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는 산업과 생활현장에서 에너지 효율제고 노력이 얼마나 일상화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국민 개개인의 각성과 실천이 요구된다.

▲ 문성권·광주시 서구 양1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려 지급합니다.

기 고

## 최 흥 압



정부는 영산강 하구안에서부터 상류인 광주 광신대교까지 83.59km의 물류 운하를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남도와 지역 건설업체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주일보에서도 영산강 물류운하를 조속히 시작하는 주장을 소개했다.

하지만 운하는 경제성, 환경과의 등 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본다. '빨리 하자'는 주장은 경부운하를 본뜨자는 것이다.

이같이 '영어실력'과 '회화'는 별개의 문제다. 영문학을 전공한 영어교사가 영어회화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수치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기초가 잘 다져진 교사들이기

관련이 없으며, 영산강이나 인근 바다를 더 오염시킬 수 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은 영산강 운하를 건설할 경우에 오염이 되어 있는 퇴적오니(汚泥)를 모두 준설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영산강 유역중 가장 오염이 심한 하구둑 근처에 존재하는 퇴적오니는 준설을 하지 않으므로 영산강 수질개선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물류운하 건설에는 4조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 정도로 끝날 지도 의문이다. 이 많은 예산이라면 수질오염 방지, 사회복지 확대, 지역경기 활성화

## 영산강 운하, 서두르지 말자

등을 위해서 더욱 보람있게 쓰일 수 있다.

물류운하가 아니고 관광용 배길을 복원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운하는 너무 규모가 크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외에도 홍수발생의 위험, 추가적 관리비용, 수상사고 위험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영산강에 배를 띠을 경우 강 양쪽에 콘크리트 용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적재와 수송을 위해서 자동차 전용부두와 대형 전용선을 운용해야 하므로 계획보다 훨씬 큰 운하와 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래에는 영산강의 수질오염을 운하 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 자연하천 상태에서 정화를 제대로 막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영산강 물류운하를 시작하기에 앞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에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조선대 법학과 교수〉

## '미아 찾기' 전담 기관 신설 절실히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운동에 경찰이 앞장서고 있다. 6·25 전쟁, 미아 가출인, 고아원이나 해외입양 등으로 헤어진 사람들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서 '미아 찾기'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미아 찾기를 경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담기관(센터)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경찰은 치안유지와 각종 범죄자 검거에도 인력이 빠듯하다. 그로 인해 미아 찾기에는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다. 미아 사건이 중대한 범죄에 의한 실종 등이 아니라 전담기관을 설치했으면 한다.

그래서 국가가 미아 찾기 전담센터를 만들고, 각 자치체에 지부를 둘 경찰과 공조하면서 미아 찾기 업무를 전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가출이나 미아 등 실종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유괴 가능성 때문에 경찰이 수사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력난 때문에 사실상 손을 떼는 실정이다. 그러니 사람 찾는 일보다 범죄수사에 더 신경써야 하는 경찰에 미아 사건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전담기관을 설치했으면 한다.

▲ 안효령·광주 북구 장등동

시 설

## 광주비엔날레 '개혁' 의지 있거나 한가

지난해 '신정아씨 파동'을 계기로 전 진기로 한 광주비엔날레 개혁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명예이사장·이사장 통합, 문화 CEO 임명, 정책 연구실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했으나 아직껏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개혁작업이 올스톱된 상태라는 것이다. 비엔날레 재단 층이 개혁을 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개혁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안의 가장 핵심인 문화 CEO 선임은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상황이다. 문화 CEO를 공모로 뽑을지, 아니면 이 사회의 전권을 받아 선임할지 기본적인 절차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화 CEO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전·현직 재단이사들로 알려져 문화 전문가는커녕 기존인물이 선임되는 것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연구실 신설도 연구원의 직급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연구원

직급이 공무원 8급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아 유능한 인재 영입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국제적인 인재 풀을 구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 18명 대우를 받고 지원하겠는가. 이는 처음부터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의사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제 7회 광주비엔날레 대회까지는 6개 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개혁이 마무리되고 대회 준비에 온전해지면 충분히 축복이다.

광주시와 재단 층은 개혁을 서둘러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 개혁작업을 미루고자 이유도 없다. 개혁방향이 정해져 있는 만큼 세부적인 절차만 마련하면 된다. 결국, 개혁에 대한 의지가 문제인 것이다. 이번에도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광주비엔날레의 미래는 없다.

## 환경 오염 주범 '폐 광산' 대책 서둘러라

환경부가 발표한 폐 금속광산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광주·전남 4곳을 포함 전국 100곳의 폐 광산 주변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92곳의 토양 및 수질 중금속 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폐 광산 대부분이 중금속 오염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오염 실태는 심각하다. 토양 및 수질은 물론 농작물과 지역 주민까지 중금속에 노출됐다. 66개 광산에서 개발하다 남은 암석덩어리 160만m<sup>3</sup>가 발견됐고 34개 광산에서는 40만m<sup>3</sup>의 석탄 찌꺼기가 쌓여 있었다. 환경오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뮴과 비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곳도 조사 대상의 2%나 됐다. 카드뮴은 폐와 신장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소는 피부장애와 구토, 생식계 이상, 근육마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 금속광산을 방지하면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토양 및 수질, 농작물 오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정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하루빨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중금속에 오염된 물을 먹거나 농작물을 섭취하면 사람도 중독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폐광산 주변에 재배되는 배추와 옥수수, 고구마, 콩 등의 농작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오염된 농작물을 폐기하기로 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폐 금속광산의 오염이 심각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대처가 소홀했기 때문이다. 폐광원 지 3년이 지난 금속광산이 936개에 달하고 있지만 오염 방지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뒤늦